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출산율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일과 가정 양립을 중심으로-

김상신^{1*}

¹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과

The Empirical Analysis of Relationship between WLF and Fertility -Focusing on Compatibility of Work and Family-

Sang-Sin Kim^{1*}

¹Division of Economics, The University of Seoul

요약 본 연구는 인구주택총조사 자료(1985~2010년)를 이용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1985년을 제외한 1990, 2000, 2005, 2010년에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는 여성의 총 출생아 수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추는 효과가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효과의 크기는 1990년부터 점차 커져 2005년에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2010년에는 2005년 대비 그 크기가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감소의 효과는 일부 정부의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에 따른 효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 정책의 확대와 정책 사각지대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현재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수혜율(take-up rate)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Abstract This paper seeks to empirically analyze the effect of WLF on fertility in Korea using the 1985~2010 Korean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1% Sample data. The results show that except in year 1985(+0.336) WLF had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fertility rates in years 1990, 2000, 2005, 2010. The size of the negative effect increases from 1990(-0.611) to 2005(-2.273). In 2010(-0.793), however, the negative effect considerably decreases when compared with the 2005 result. This alleviation is partially due to policies that have promoted compatibility between work and family life. Policy makers should therefore focus on expansion of policies for the compatibility of work and family, and give more attention to increasing take-up rate for the current policies.

Key Words : Fertility, Population and Hosing Census, Women's Labor force Participation

1. 서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응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환경조성과 관련,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출산율과의 관계가 시간에 걸쳐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실증분석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정부의 개입이 시작된 이후의 변화를 확인하여 일과 가정양립, 즉,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정부개입 효과를 간접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2012년 기준 합계출산율 1.30명으로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가장 낮은 수준으로 “초저출산율”(lowest low fertility)에 해당한다[1].

우리나라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의 원인으로서는 정부의 가족계획사업 및 인구정책, 사회경제발전으로 인한 여성의 노동시장참여 확대와 육아 및 교육비용 상승, 영아사망률 급감, 적은 자녀 선호로의 가치관 변화 등이 거론되고 있다[2].

*Corresponding Author : Sang-Sin Kim(Univ. of Seoul)

Tel: +82-2-958-4052 email: zarkss@gmail.com

Received August 8, 2013

Revised (1st September 16, 2013, 2nd October 14, 2013)

Accepted November 7, 2013

우리나라 저출산 대응정책은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에 의해 추진되고 있으며, 2011년부터 제2차 계획(새로마지 플랜 2011~ 2015)이 시행되고 있다.

선행연구결과를 참고해 보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출산율과의 관계는 일정하게 그 결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으나, 대체로 선진국의 경우에는 1980년 이전에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의 관계가 음(-)의 관계를 나타냈으나, 1990년 이후 양(+)의 관계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3]. 이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와 양성평등의 고용 문화가 발달된 국가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이 동시에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의 검증을 통해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응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환경조성과 관련,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출산율과의 관계가 시간에 걸쳐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실증분석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정부의 개입이 시작된 이후의 변화를 확인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정부 개입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확인 및 추가적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가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출산율은 음(-)의 관계를 가질 것이나 정책적 효과가 발생한다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음(-)의 효과 크기는 감소할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1985~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 1% 샘플자료(인구부문)를 이용하였다. 해당 기간 중 출산관련 자료가 포함되지 않은 자료를 제외하고 1985, 1990, 2000, 2005, 2010년 5개 자료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분석의 기초자료는 20~59세 사이의 기혼 여성 중 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여성의 결혼, 경제활동참여, 출산율을 같이 고려하여 분석을 수행할 경우 각 변수들 사이의 내생성(endogeneity)으로 인하여 일치 추정량을 추정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며, 이들 상호간의 내생성을 통제할 수 있는 도구변수(instrument variable)를 찾는다 하더라도 과거 경제활동, 결혼 당시 경제상황 등과 연관이 없는 해당 시점자료만을 제공하는 본 자료의 특성상 일치 추정량을 담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분석 대상을 위와 같이 제

한하였으며, 적절한 도구변수를 적용해서 가급적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본 자료에는 가구의 소득에 대한 정보가 없어 부득이 이에 대한 대리변수로써 배우자의 학력과 나이를 사용하였다.

본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에 대한 주요 기초통계량은 다음과 같다.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변수명	1985	1990	2000	2005	2010
Number of Children	2.97 (1.81)	2.59 (1.60)	2.07 (1.06)	1.97 (0.95)	1.95 (0.90)
LFP_woman	0.32 (0.47)	0.33 (0.48)	0.42 (0.49)	0.44 (0.50)	0.57 (0.50)
Age_woman	38.05 (10.00)	38.86 (9.90)	40.61 (9.19)	42.48 (8.83)	44.11 (8.71)
Schooling_woman	8.18 (3.78)	9.21 (3.81)	10.92 (3.42)	11.60 (3.33)	12.06 (3.19)
ratio of LFP_woman by age group	49.21 (8.24)	54.89 (7.24)	57.49 (5.73)	58.83 (6.00)	60.38 (5.30)
Age_man	41.54 (10.58)	41.93 (10.42)	43.48 (9.82)	45.31 (9.57)	46.89 (9.44)
Schooling_man	9.91 (3.97)	10.91 (3.91)	12.14 (3.46)	12.60 (3.39)	12.88 (3.31)
LFP_man	0.91 (0.29)	0.91 (0.29)	0.88 (0.32)	0.88 (0.32)	0.88 (0.32)
Obs._woman	76,661	87,652	100,768	99,022	99,942
Obs._man	69,315	77,892	88,876	85,241	93,741

mean, () standard deviation
LFP: Labor force participation

2.2 연구절차

분석은 1985, 1990, 2000, 2005, 2010년 각 연도별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와 출산율과의 관계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의 변화추세를 확인한 후, 산업별 차이 분석과 일과 가정 양립 지원 정책 현황을 종합, 일과 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효과를 간접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2.3 연구방법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와 출산율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여성의 총 출생아 수를 종속변수로 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여부(1과0의 이산변수)를 설명변수로 한 통상회귀분석(Ordinary least square)으로 계수를 추정할 경우 내생성문제로 인하여 추정치가 편이 될(biased)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여성의 출산이 여성의 경제활동참

여 변수들의 설명 불가능한 부분 또는 오차항(error term)과 상호 관련되어 있을 경우에는 동시성 문제(simultaneity problem)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추가적으로 선호의 이질성(preference heterogeneity)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선호의 이질성이란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해 평균보다 더 강하게 선호하는 여성은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평균이상으로 더 강하게 선호하는 경향을 가질 것이기 때문이다. 선호의 이질성이 내포되어 있는 경우의 일반적 회귀분석 추정치들은 누락변수(omitted variable)를 무시함으로 인해 통계적 편의가 나타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도구변수(instrumental variable)를 찾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여부 변수에 대한 도구변수로써 해당년도의 노동시장 여건을 고려하기 위해 연령별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을 사용하였다. 해당 연도의 각 연령별(20~59세 각 5세 단위)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 변수는 해당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나 출산율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분석모형으로는 처치효과(Treatment-effect)모형(이하: TEM)을 이용하였다. TEM은 2단계 추정시 내생적 선택 변수(이산변수)를 가지는 모형이다([4] 참고).

본 분석에서 주요 식은 다음과 같다.

$$y_j = x_j\beta + \delta z_j + \epsilon_j \quad (1)$$

y_j : j 여성의 총 자녀수

x_j : j 여성 및 배우자 인구학적 특성

z_j :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여부(1, 0)

z_j 는 관측되지 않는 잠재 변수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가정된다.

$$z_j^* = w_j\gamma + u_j \quad (2)$$

여기서 w 는 z 에는 영향을 미칠 것이나 y 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로 본 분석에서는 각 연령별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을 이용하였다.

3. 연구결과 및 해석

분석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수행되었다. 첫째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통상회귀분석(OLS)과 TEM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은 여성과 배

우자의 특성을 같이 고려한 모형을 분석하였다. 두 번째는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기혼여성만을 대상으로 각 산업별로 어떠한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OLS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1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와 출산율과의 관계

Table 2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와 출산율과의 관계를 보기 위하여 1985, 1990, 2000, 2005, 2010년 자료를 OLS와 TEM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두 모형 중 하우스만 테스트(hausman -test)를 통해 적합한 모형의 분석결과만을 제시하였다.

[Table 2] Relationship between WLPF and fertility

Variable	1985	1990	2000	2005	2010
	OLS	TEM	TEM	TEM	TEM
Age_woman	0.093*** (0.0014)	0.081*** (0.0013)	0.031*** (0.0010)	0.020*** (0.0010)	0.015*** (0.0009)
Schooling_woman	-0.070*** (0.0021)	-0.071*** (0.0018)	-0.047*** (0.0015)	-0.037*** (0.0016)	-0.030*** (0.0015)
Age_man	0.018*** (0.0013)	0.020*** (0.0012)	0.028*** (0.0009)	0.024*** (0.0009)	0.020*** (0.0008)
Schooling_man	-0.029*** (0.0019)	-0.022*** (0.0016)	-0.009*** (0.0014)	-0.008*** (0.0014)	-0.004*** (0.0013)
LFP_man	0.354*** (0.0162)	0.301*** (0.0137)	0.215*** (0.0095)	0.201*** (0.0096)	0.108*** (0.0090)
LFP_woman	0.336*** (0.0106)	-0.611*** (0.0717)	-2.273*** (0.0952)	-2.320*** (0.1369)	-0.793*** (0.0767)
constant	-0.822*** (0.0348)	-0.574*** (0.0325)	0.965*** (0.0449)	1.395*** (0.0646)	1.114*** (0.0497)
LFP_Ratio_woman		0.026*** (0.0007)	0.022*** (0.0007)	0.015*** (0.0007)	0.020*** (0.0008)
Lamda		0.451*** (0.0432)	1.424*** (0.0591)	1.458*** (0.0853)	0.513*** (0.0480)
Num. obs	69,315	77,892	88,876	85,241	83,741
R-square	0.5521				
Hausman Test	9.10 (prb>chi2)	117.62	996.92	329.94	74.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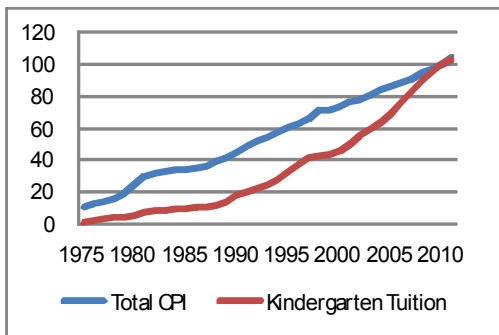
() standard error, * p<0.1, ** p<0.05, *** p<0.01

분석결과를 보면 1985년을 제외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출산율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크기는 1990년에서 2005년까지 급격히 증가하다가 2010년에 그 크기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분석결과를 보면 1985년에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와 출산율이 (+)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85년의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그리 활발하지 않은 시기로서 1985년 나이 그룹별 취업률을 보면 34세 이하(24.8%)의 경제활동참여율이 낮는데 비해 40세 이상(40.5%)에서의 경제활동참여율이 높게 나타난 것을 볼 때, 여성의 지속적 경제활동참여가 아닌 출산이 완료된

이후의 경제활동참여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의 주를 이루며, 이는 가족부양을 위한 생계적 취업으로 출산율과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1985년의 경우에는 자녀양육 비용이 높지 않은 즉,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에 따른 기회비용이 크지 않고 소득이 증대됨에 따라 자녀의 효용이 증가하는 기간으로써 많지 않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소득증대에 따라 자녀의 증가현상이 나타나는 시기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1990년부터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현재와 비슷한 수준인 47%(2011년 49.4%)까지 상승하면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와 출산율과의 역의 관계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을 볼 수 있다. 즉, 1990년대 들면서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에 따른 소득의 증대보다 자녀의 양육비용이 더 크게 증대되기 때문에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따른 소득증대 효과가 자녀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시기로 볼 수 있다. 이는 통계청의 유치원 납입금의 물가지수 추세를 보면 자녀의 양육비용 증가가 미친 영향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Fig. 1] Trends in Kindergarten Tuition(2010=100)

Fig. 1에 따라 유치원납입금을 대표적인 보육 및 교육 비용으로 보면 2010년 기준으로 다른 물가(Total CPI: 소비자물가지수)들에 비해 낮았던 유치원 납입금이 1980년대 중반 90년대 초부터 물가상승 속도보다 빨라지는 양상을 볼 수 있다. 비록 유치원 납입금만 보았으나, 장기적 교육비용인 고등교육 비용 및 사교육비용을 합하면 실질적인 보육 및 교육비용의 상승은 1980년대 중반, 90년대 초부터 급격히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0년에 들어서면서 급격히 커지는 출산율과 여성경제활동 참여간의 역의 관계는 1990년 대비 2000년에 20~34세 사이의 경제활동 참여 비율이 대폭 증가함으로써(20~24: 1990년 19.9%, 2000년 31.2% | 25~29: 1990년 19.3%, 2000년 30.2% | 30~34: 1990년 25.4%, 2000년 34.2%) 나타난 현상으로도 일부 볼 수 있을 것이다.

2010년에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와 출산율 사이의 역의 관계의 크기가 2005년에 비해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젊은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일정수준으로 유지되고 보육 및 교육비의 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여성들의 일과 가정 양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들이 일부 경감된 효과로 가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일과 가정양립을 위한 사업들의 경우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며 일과 가정양립 정책은 그 재원을 고용보험에서 충당하고 있다. 이는 지급대상자가 고용보험 가입자로 제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앞서 가정을 확인하기 위하여 2005년 이후 제도 수혜자격이 주어지는 여성의 고용보험 가입율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Table 3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를 여성과 남성으로 분류한 후 특정기간동안의 증가율을 비교한 결과이다.

[Table 3] Insurants Protected by Unemployment Insurance

연도	Num. of Insurants			Growth rate(%)		
	Total	Men	Women	Total	Men	Women
2001	6,908,888	68.21%	31.79%	2.40	1.71	3.90
2005	7,965,597	65.80%	34.20%	6.47	5.67	8.05
2010	10,131,058	62.30%	37.70%	4.95	3.78	6.93
Growth rate 2001~2010	-	-	-	3.49	3.14	5.75
Growth rate 2001~2005	-	-	-	2.52	2.50	4.77
Growth rate 2006~2010	-	-	-	4.84	3.64	6.94

위 표를 보면 2001~2005년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증가율 보다 2006~2010년간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증가율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비록 여성가입률만이 2006~2010년에 더 급격히 증가한 것은 아닐지라도, 2006~2010년이 2001~2005년에 비해 고용보험 가입자가 더 많이 증가하였으며, 가입 증가로 인해 여성이 정부의 일과 가정 양립지원 정책의 수혜를 더 많이 보았을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3.2 경제활동참여여성에 대한 분석결과

앞서 분석 집단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만을 대상으로 직업 및 산업별로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가 다른지를 분석하였다. Table 4는 배우자의 특성이 통제된 상태에서 산업이 포함되었을 경우의 분석결과(OLS 분석)를 기반으로 해당 중사산업 중 상대적으로 출산율에 (+)

의 영향(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이 큰 순서대로 7개 산업까지 나열한 결과이다.

[Table 4] Relationship between Fertility and Occupational Classification

	1990	2000	2005	2010
1	Mining	Agriculture	Agriculture	Agriculture
2	Agriculture	Education service	Public Administration	Unclassified
3	Construction	Retail and Wholesale	Education service	Public Administration
4	Retail and Wholesale	Financial and Insurance business	Retail and Wholesale	Education service
5	Manufacturing business	Communication	Real estate and renting	Health and social work
6	Personal service	Public Administration	Communication	Construction
7	Financial and Insurance business	Construction	Electric, gas and tap water industry	Retail and Wholesale

[Table 5] Proportion of paid parental leave by industry (2004, 2010)

Industry	2004	2010
Manufacturing business	17.2%	18.6%
Retail and Wholesale	8.3%	10.2%
Financial and Insurance business	30.3%	13.7%
Education service	2.8%	4.8%
Health and social work	8.8%	16.8%

Source: [5]

산업별 분석결과를 보면 농업, 임업 관련 여성종사자의 경우 출산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으로 지방이 대도시에 비해 출산율이 높으며, 농업 등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인원들의 경우 과거 출산율이 높은 연령층의 지속적 노동참여와 출산율이 높은 지방의 현상이 반영되어 나타난 것으로 1차 산업을 제외하고 출산율이 높은 산업을 보면, 1985년에는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 건설업, 제조업 등에서 출산율이 타 산업분야에 비해 높았으며 1990년대에는 건설업,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 제조업에서 출산율이 타 산업분야에 비해 높았다. 1985년과 1990년에는 전문직 보다는 여성의 취업이 비교적 용이한 분야에서 출산율이 높았는데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로 인한 경제적 이득이 출산시 지불되는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나타나다 점차 출산시 지불되는 비용이 커지면서 이러한 효과가 적어지는 시기로 앞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와 출산율의 관계에서와 같이 1985년에는 (+)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과 같이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2000년대부터 교육서비스, 공공행정 등 여성의 경제적 신분이 보장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이 비교적 용이하게 수행되는 산업군에서 여성의 출산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여성의 단순 경제적 참여보다는 양질의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출산율을 제고하는데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은 2005년 이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결국 이러한 양질의 노동시장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출산율이 높은 양질의 노동시장의 경우 대체로 일과 가정의 양립이 잘 보장되는 산업군일 것이다. 이러한 산업군을 2004년 이후의 대표적인 일과가정양립 지원사업인 산업별 육아휴직 급여 초회수급인원 비중 추이를 통해 보면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등이다. 결국 2000년 이후 출산율이 비교적 높은 산업군에서 일과가정양립 지원의 수급 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것을 통해서 정부의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과 해당 산업군에서 이를 얼마나 많이 보장하느냐에 따라 출산율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가지 추가적으로 주목해보아야 할 점은 급여 측면에서 여성들의 선망의 직장으로 생각되는 금융 및 보험업에서의 출산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출산정책과 관련된 FGI 등을 통해 유추해 보면 금융 및 보험업의 업무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경력단절에 따른 우려로 출산휴가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비해 공공기관 근로 여성들은 기관에 따라 최대 3년까지(무급휴가 포함) 출산휴가를 연장할 수 있다.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직업을 통제한 분석 결과에서는 사무종사직 여성의 경우 출산율이 다른 직업군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사무직의 경우 비교적 젊은 미혼여성을 위주로 채용이 이루어지며 이러한 취업의 지속고용이 어려운 대표적 직업군에 속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인구주택총조사 자료(1985~2010년)를 이용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과 일과 가정 양립 지원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1985년을 제외한 1990, 2000, 2005,

2010년에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는 여성의 총 출생아 수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추는 효과가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효과의 크기는 1990년부터 점차 커져 2005년에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2010년에는 2005년 대비 그 크기가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2005, 2010년의 결과는 앞서 설정한 가설을 일부 증명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와 출산율 사이에 역의 관계가 성립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50% 수준) 수준을 더 낮춰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은 국가경쟁력을 더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결국, 여성의 일과 가정양립 지원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와 출산의 관계를 정(+)의 관계로 돌릴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2010년 경제활동참가와 출산율 사이에 역의 관계가 2005년에 비해 대폭 줄어들었다는 점은 2001년부터 여성의 일과 가정양립 지원 제도가 도입되었고 이러한 제도의 효과가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 볼만 하다.

정부의 일과 가정양립지원 정책이 출산에 미치는 효과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여성이 출산으로 인해 겪는 경력단절비율이 41.2%로 높은 점을 들어 일과 가정양립지원 정책의 중요성을 피력하는 연구결과가 있는 반면[6], 여성의 고용을 늘리는 효과는 있지만 출산율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도 있어[7], 이러한 연관성을 추가적인 산업별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미치는 영향 분석과 고용보험 가입률 변화, 정부의 일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정책 즉, 육아휴직 급여의 산업별 수혜율 자료를 연계해서 살펴본 결과 어느 정도 정(+)의 연계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비춰 일과 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지속적 확대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근본적으로 일과 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확대를 위해서는 정책 수혜 대상자를 기존의 고용보험 가입자를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넓히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나, 제원 및 형평성 등의 문제를 고려할 때 아직은 고용보험의 틀 안에서 사업을 수행하되, 고용보험 가입자를 늘려 사각지대(미가입자)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정책 지원의 대상은 되지만 직장의 분위기 및 업무의 연속성 유지, 경력단절의 위험 등에 의해 보장된 지원정책마저도 여성이 원하는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 정책 수혜 대상자에 대한 직무교육 등 정책에 대한 수혜율(take-up rate)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의 병행이 필요할 것이다.

References

- [1] OECD (2011), 『Factbook(2011)』
- [2] Ryu, Deokhyeon, "Fertility Decline and Female Labor Supply in Korea", Public Economy, No. 12, 1, pp. 39-74, 2006.
- [3] Ahn, Namkee, and Pedro Mira, "A note on the changing relationship between fertility and female employment rates in developed countries.",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15.4: 667-682, 2002.
DOI: <http://dx.doi.org/10.1007/s001480100078>
- [4] STATA, 『STATA 11 base reference manual』, 2009.
- [5]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Statistical Yearbook Unemployment Insurance, 2010.
- [6] Lee, Samsik, "Causes of Low Fertility and Future Policy Options in Korea",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06. 1., 2006.
- [7] KDI, "In-depth Evaluation on Fertility Policy", Unpublished, 2012.

김 상 신(Sang-Sin Kim)

[정회원]



- 2008년 8월 :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경제학석사)
- 2009년 3월 ~ 현재 :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박사과정 수료
- 2010년 1월 ~ 현재 :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연구원

<관심분야>

정책평가, 연구개발, 계량경제학